

#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첫 발 “실무 컨트롤타워”

40년 만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특별법과 시·도민 의견수렴, 공론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광주와 전남도는 이날 나주 전남연구원에서 제1회 광역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민관합동 실무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공식 발족했다.

추진협의체는 광주·전남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공동위원장으로 김영문 광주시 경제문화복지시장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광주에서는 정영팔 광주지방시대위원장, 전남에서는 조보훈 전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협의체 위원은 양 시·도 의회, 시·군·구 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교육·문화계 대표 등 광주·전남에서 각각 8명씩 참여했다.

협의체 발족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협의체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청와대 오찬회동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시·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방안, 행정통합 특별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와 도는 앞서 지난 2일 ‘대통합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행정 자원을 위한 추진기획단 구성에 이어 이날 추진협의체를 발족, 통합의 실질적 추진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추진협의체는 광주·전남의 공동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안을 제안하며 시·도민 참여 공론화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2일 오후 나주시 전남연구원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협의체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각계 대표 20명 참여 민관합동 실무기구로 발족 12일 첫 회의, 특별법·의견 수렴·공론화 등 논의 특별법, 8편 24장 2절 288조... 안도걸 의원 발의

특히, 행정통합의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 제공과 사회적 논의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도는 이를 위해 지역별·계층별 목소리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대통합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이다. 또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구성, 27개 시·군·구를 순회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도는 이와 함께 추진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법률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안으로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해 7월 1일 320만 시·도민과 함께 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 행정통합 추진협의회의를 구성, 27개 시·군·구를 순회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우리는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추진협의체는 시·도민의 이야기

를 듣고, 임명 지원을 하고, 무한대의 상상력으로 광주·전남 통합의 미래를 그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도 인사말을 통해 “매우 뜻 깊은 자리로, 광주와 전남 대통합을 통해 호남의 대부흥을 이루겠다”며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큰 틀에서 8편 24장 2절 288조로 구성되며, 통합의 목적, 국가와 특별시의 책무, 자치권 강화, 인공지능과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안전과 균형발전으로 구성된 예정이다.

특히,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핵심 조항으로 담길 예정이며, 이를 감안해 국회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인 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 을)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뉴스

## 광주시, 폭염·열섬 대응 도시숲 10곳 조성

### 미세먼지 저감숲 9곳·녹색복지숲 1곳 등 연말까지 조성

광주시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도시열섬과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도시숲 10곳을 새로 만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20억6000만원(국비 13억1000만원, 시비 7억5000만원)을 투입, 미세먼지 저감숲과 녹색복지숲 등 2개 분야 도시숲 1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도심 열기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여 시원한 푸른 광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산림청 등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 도시숲 관련 국비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숲 사업으로 3개 사업 9곳에 20억 원을, 취약계층과 주민이용 편의를 고려한 녹색복지숲 1곳에 6600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미세먼지 저감숲 중 도시바람길숲은 동구 필문대로, 서구 풍암동 경관녹지, 남구 효천3로, 남구 유안공원, 광산 수완동 보행자전용도로 등 5곳, 자녀안심 그린숲은 남구 방림·월산초

교, 광산 선운초교 등 3곳, 생활밀착형 숲(실외정원)은 북구 전남대 1곳이다. 또 광산구 보림의집에는 산림복지 나눔숲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심 내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고, 폭염 때 체감온도를 낮추는 한편 미세먼지 차단, 휴식공간 제공 등 시민 체감형 녹색복지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도시숲 조성·관리위원회 열어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과 규모의 적정성, 권역별 균형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숲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폭염을 완화하는 기후조절기능을 갖춘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이라며 “기후변화로 더워지는 광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원하고 푸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숲 조성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 광주전남 혈액보유량 2.8일분, 시민들 헌혈 참여 절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원장 박진성)은 1월 12일 00시 현재 광주·전남지역 혈액보유량이 2.8일분으로 보건복지부의 혈액 보유 권장량인 5일분을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 최근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혈액원은 추운 날씨와 더불어 광주·전남 고등학교 전체가 이 주부터 동계 방학에 들어가 혈액보유량 3일분 전·후 상태가 1월 말까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6년 1월 들어서는 혈액보유량이 일일 평균 2.7일분을 기록하고 있다.

혈액원에 따르면 최근 작년 12월 12일부터 1월 12일 현재까지 1개월간 광주전남 혈액 보유량이 평균 4일분 미만 지속 상태가 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19년과 20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혈액보유량이다.

특히 지난 2025년 추석 이후 의료기관 수술 건수 증가 등으로 수혈용 혈액 수요 증가에 비해 헌혈자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저출산 가속화로 인한 10대, 20대 젊은 헌혈자 감소의 영향도 있다. 2025년에는 광주전남 헌혈자수가 183,217명으로 전년 192,586명 대비 4.9% 감소한 반면 10대와 20대 헌혈자수는 각각 9.5%, 9.3% 감소하였다.

해 지난 1월 8일, 9일 양일간 헌혈자 대상 문자를 발송 하였으며 TV 자막 광고 및 미디어 등을 통해 헌혈 참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혈액원에서는 70일간의 사랑의 헌혈 릴레이 이벤트, 헌혈자 대상 기념품 증정 프로모션(~2.1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적십자 봉사원 및 헌혈 SNS 서포터즈 등과 헌혈의집 방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혈액원에서는 상위 기관인 혈액관리본부와 전국 단위의 혈액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응급 수술, 혈액암 등 치료 등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도 최근 혈액 재고량이 급감하고 있어 들고 광주전남 시민들의 헌혈 참여가 절실한 상태이다.

박진성 혈액원장은 “겨울 방학, 날씨 등으로 인해 매년 동절기에 주기적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광주·전남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다른 음식점 알아봐” 돌연 개관취소... 예비부부 ‘날벼락’

### 북구 지식산업센터 내 4월 개관 예정 취소... 용도변경 승인 없이 결혼식 사전 예약받아

광주에 4월 문을 열 예정이던 한 음식점이 돌연 개관을 취소하면서 대관 예약을 한 예비부부 370여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음식점은 지자체의 건물 용도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예약을 받았고 갑자기 개관 취소를 공지했다. 갑작스레 예약 일정을 바꿔야 하는 예비부부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3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웨딩업체 갑질 계약서? 위약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4월 해당 음식점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음식점 측으

로부터 ‘예약 진행이 불가능하니 취소하거나 다른 음식점을 알아봐 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관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했지만 대표가 ‘정성적으로 예약이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오늘 개관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광주에 본점을 둔 음식점은 지난 12일 계약자들에게 본점 할인혜택 예약 승계, 타 웨딩홀 연결 및 일정 조율 지원, 계약금 전액 반환 후 계약 취소 등의 제안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음식장은 광주 북구 첨단국가산업단지 2지구 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설 예정이

었다. 업체는 지난해 11월 말 관할 지자체인 북구에 센터 일부 층의 용도변경을 신청, 북구는 국가산단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보완사항을 요구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합건물이라는 특성상 다른 입주 업체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해당 업체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수백명의 예비부부가 피해를 입게 됐다. 이들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다른 음식점을 구하기 어렵고 신혼여행 일정·청첩장 인쇄·스냅사진 촬영 등 결혼 준비 전반에 차질이 생겼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예비부부는 “음식장 측 제안은 계약 당시의 날짜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며 서비스 옵션에 대해서도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타 음식점으로 옮길 경우 발생할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문제를 문의하니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웨딩업체 본점 관계자는 “모든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며 “그러나 지자체의 무리한 자료 보완 요구로 공사가 늦어져 불가피하게 개관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국가산단 특성상 갖춰야 할 법적 근거와 관계기관 협의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 따로 사업을 중단했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